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10.6.(화) 10월 1주차 (제26-53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반도체) 미국 의회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 동향 분석 ····· 2
• (통상) 美 주도 철강 생산국 추적·우회수출 대응 합의 ····· 6

미국 경제통상 동향

• (에너지) 美 행정부, 디젤 가격 인하 조치 추진 ····· 10
• (관세) 철강 관세 산정 지침 관련 美CBP 상대 소송, 절차 위반 여부 쟁점 ····· 11
• (통상) 美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 한·중 수출통제 및 공급망 협력 국무부에 브리핑 요청 ····· 12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법안) 핵심광물, 관세 등 상·하원 발의 3건 ····· 13
• (행사안내) Peterson, American German Institute 등 2건 ····· 13

이 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4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15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10.7(수)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eting minutes)
10.8(목)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Weekly Jobless Claims)
10.9(금)	• 10월 미시간대학교 잠정 소비자심리지수 조사 (U.Michigan Prelim Consumer Survey)
10.13(화)	• 9월 기존 주택 판매 (Existing Home Sales)

워싱턴 포커스

(반도체) 미국 의회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 동향 분석

■ 미 의회, 첨단 AI 반도체 장비·서비스·우회수출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 입법 강화 추진
■ AI 칩 의회심사, 제조장비 국가 단위 통제, 첨단 칩 위치검증 의무화가 핵심
■ 우리 기업은 중국 내 기존 팹 예외여부, 역외통제 확대, HBM 수요 영향 등 모니터링 필요

1. 입법 추진 배경

□ 의회는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의 정부 재량과 집행상 허점을 입법 과제로 제기

• 고성능 AI 칩이 대규모 모델 훈련과 군사·정보 활용에 필요한 전략자원으로 부상하여, 중국 등 우려국의 첨단 연산능력 확보를 제한하려는 입법 논의 확대

- 완성 칩의 수출 허가뿐 아니라 제조장비·부품·기술 서비스, 제3국을 통한 반도체 밀수·전용까지 통제 범위를 법률로 보완하려는 동향 관측

□ 정부의 집행 권한과 의회의 국가안보 통제권 사이의 관계가 입법의 핵심 쟁점

•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가 완화될 가능성을 제한하고,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반영

- 즉, 반도체 수출통제의 수준을 법률로 고정하거나 의회 통지·인증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부의 정책 변경에 제약을 두려는 성격

2. 주요 반도체 관련 법안 동향

1 AI OVERWATCH Act :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의회 감독

• (개요) 우려국에 대한 첨단 AI 칩 수출허가에 의회의 감독 절차 강화 목적

* (법안번호 H.R. 6875) Artificial Intelligence Oversight of Verified Exports and Restrictions on Weaponizable Advanced Technology to Covered High-Risk Actors Act

-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무기 판매 의회심사 방식을 첨단 AI 칩에 적용하여, 행정부의 우려국 대상 수출허가에 의회 불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 **(대상 품목)** 기존 수출통제분류(ECCN) 체계와 연산 성능 기준을 연계함으로써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AI 가속기를 겨냥

- TPP 4,800 이상이거나, 일정 TPP·성능밀도 조합 또는 DRAM·인터커넥트 대역폭 기준을 충족하는 데이터센터용 집적회로를 대상으로 규정
- 우려국으로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등 제시

• **(의회심사 절차)** 상무부가 우려국 대상 수출·재수출·국내 이전 허가를 승인하기 최소 30일 전 의회 소관 위원회에 인증·통지

- 의회는 30일 내 '불승인 공동결의'로 수출을 차단할 수 있으며, AECA상 신속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양원에서 우선심의

• **(대중 규제)** H.R. 6875는 일정 기준 이상의 'restricted integrated circuit'에 대해 중국 등 우려국 대상 허가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도록 규정

- 별도로 상원 FY2027 NDAA에는 최첨단 AI 칩의 우려국 수출 제한을 18개월 유지하는 AI OVERWATCH 관련 조항이 반영

• **(동맹국 우대)** 신뢰할 수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허가면제 경로를 신설하고, 일정 보안·소유구조 요건을 전제로 해당 제도의 일부 동맹국 확대 방안 검토

2 MATCH Act : 제조장비·부품·서비스 통제와 동맹국과 협력 강화

• **(개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체 생산기반을 구성하는 장비·부품·서비스를 타깃

* (법안번호 H.R. 8170/S. 4281) 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

- 미국의 단독 통제만으로는 중국이 네덜란드·일본산 장비로 대체 조달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동맹국의 수출통제 정렬을 한시적 유도하는 것이 핵심

• **(대상)** 우려국이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반도체 제조장비

- DUV 액침 노광장비, TSV(실리콘관통전극) 증착장비, 극저온 식각장비, 코발트 증착장비 및 ECCN 3B001·3B002·3B993 해당 품목을 명시

• **(국가단위 통제)**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 내 모든 지역 대상 수출·재수출·이전·서비스를 '거부 원칙(policy of denial)' 허가제로 전환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및 D:5 국가 중 국무장관이 추가 지정한 국가

- 기존 특정 기업(Entity List) 중심 통제를 국가 전체 단위로 확대하여 페이퍼컴퍼니·관계사를 통한 우회 조달을 차단

• **(대상 시설)** 우려국 내 첨단공정 생산시설과 화웨이, SMIC, 화홍, YMTC, CXMT 및 그 자회사·계열사·합작사 시설

- 해당 시설 대상 수출·재수출·국내이전 및 서비스 제공은 거부 원칙 허가 대상
- 법 제정일 당시 존재하고, 우려국 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계속 소유·운영하는 팹은 대상 시설에서 제외

* 삼성전자 시안(낸드), SK하이닉스 우시(DRAM)·다롄(낸드) 등 우리 기업 중국 팹은 문언상 예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신·증설 시설과 소유구조 변경 시에는 적용 제외가 불분명

• **(역외 적용)** 미국산 통제 품목 함량이 0%를 초과(미소 기준 사실상 폐지)하거나 미국 기술·소프트웨어·장비로 생산된 외국산 제품도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

- 동맹국이 시한 내 동등한 통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해외 직접 제품 규칙(FDPR)'을 일방 적용하여 외국 장비업체 제품을 통제

3 Chip Security Act : 첨단 칩 위치검증 및 전용 방지

• **(개요)** 합법적으로 제3국에 수출된 첨단 칩이 중국 등으로 밀수·전용되는 문제를 기술적 검증으로 보완하려는 법안

* (법안번호 H.R. 3447 / S. 1705) Chip Security Act

- 최근 미국 법무부의 AI 칩 밀수 조직 기소 사례가 잇따르면서, 서류 기반 최종 사용자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

• **(대상 품목)** ECCN 3A090·3A001.z(집적회로) 및 4A090·4A003.z(컴퓨터·서버) 해당 제품과 그 후속·유사 분류 품목

- 보안장치(chip security mechanism)는 소프트웨어·펌웨어·하드웨어 기반 장치 또는 물리적 보안장치로 폭넓게 정의

• **(절차)** 상무부 장관 주관의 다음과 같은 2단계 집행 절차 명시

- ① 상무장관은 대상 제품의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 등에 위치검증(location verification) 기능 탑재를 의무화 (법 제정 후 180일 이내)
- ② 제정 후 1년 내 추가 보안장치의 실현 가능성·신뢰성·효과성 평가 및 의회 보고. 이후 신규 보안장치를 평가하고, 준수 제품에 대한 수출 지역 유연성 확대 등 통제 조정 방안을 권고

3.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 MATCH Act의 '기존 외국 기업 팹 예외' 조항 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팹은 '25.12.31.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가 종료되고, '26년분 연간 장비반입을 허가받아 운영 중
- MATCH Act 현 문안은 기존 외국기업 소유 팹을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문안이 변경될 수 있어 모니터링 필요

□ 역외 적용 조항으로 국내 장비·부품업체의 대중 수출도 영향권

- 미국산 통제 함량 0% 초과 또는 미국 기술·SW로 생산된 제품까지 포괄할 경우, 우리 대중 수출에 대한 BIS 허가 요건으로 이어질 가능성
- 중국 고객 대상 원격 진단, 기술지원, 교육, 소모품·부품 공급계약의 서비스 정의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상 불가항력·규제 변경 조항 정비

□ AI OVERWATCH Act는 우리 메모리·HBM 기업의 대중 수요 변동 요인

- 대중 수출제한이 강화될 경우 중국향 AI 가속기 출하 및 이에 탑재되는 HBM 수요에 간접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동맹국에 대한 신속 수출 경로가 도입되면 국내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사업자의 첨단 GPU 확보에 유리할 수 있으나, 미국 정부의 보안·소유 구조·감사 요건 강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

□ Chip Security Act의 위치검증 의무 규제는 향후 서버·데이터센터 등 공급망 전반으로 파급 가능

- 국내 서버 조립·재수출 기업과 GPU 구매 데이터센터는 위치검증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공급받고 향후 재판매·이전 시 관련 조건을 부여받을 가능성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하원 외교위('25.12.19), 상원 외교위(4.8), 하원 홈페이지(3.26) 등

(통상) 美 주도 철강 생산국 추적·우회수출 대응 합의

■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GFSEC), 보조금·공급망·무역조치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합의
■ 용해·주조국 정보로 철강 생산국을 추적하고, 정보 공유와 세관 협력으로 우회수출에 대응
■ 美 업계의 한국산 규제 요구와 수출시장별 정보 제출 요건·파생제품 규제 동향 점검 필요

1. 개 요

□ 주요 철강 생산국,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밀워키 프레임워크' 채택

•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GFSEC)*은 미국 밀워키에서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로 개최된 장관회의에서 '밀워키 프레임워크'를 채택(9.30)

* 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 미국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공급과잉이 회원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근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방향에 합의

-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 등 GFSEC 회원국은 세계 철강 수입의 약 56%를 차지

• 회원국들은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자국 철강산업·근로자·공급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

- OECD는 '28년 세계 철강 과잉생산능력이 7억 4,500만 톤 이상으로 전망하며, 기본합의문은 추가 대응 없이는 산업·근로자·공급망의 위협이 커질 것으로 평가

- 중국 내 철강 수요 정체로 수출이 늘면서, '25년 철강 수출은 1억 3,100만 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20년 대비 153% 증가

2. 밀워키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보조금과 정부 지원 억제

• 회원국들은 경제성 없는 철강설비 증설을 유도하는 정부 지원을 억제할 방침

- 정부 지원이 공급과잉을 지속시키며, 공동선언문은 중국 철강기업의 자산 대비 보조금 비율이 '19년 이후 거의 두 배로 상승했다고 설명

- 회원국의 보조금·지원 정보를 GFSEC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공유하고, 비회원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도 공동 점검

- 다만 구조조정·산업 전환을 위한 한시적 지원은 전체 생산능력을 늘리지 않고 장기적인 사업성을 확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로 인정 가능

□ 용해·주조국 정보 수집·공개로 철강 공급망 추적 강화

• 철강의 최초 생산국을 확인해 우회수출과 의심스러운 거래를 파악할 계획

- 수입업체로부터 용해·주조국 정보(country of melt and pour)*를 수집·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후속 GFSEC 실무회의에서 공유

* 철강이 제강로에서 처음 액체 상태로 생산된 뒤 최초의 고체 형태로 주조된 국가를 의미

-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회원국산 철강의 무역자료를 교환하고, 요청과 가용 자원에 따라 수입 감시체계 구축·개선을 지원

- 법령상 기밀정보는 공개·교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의 민감정보는 집계 형태로 처리해 투명성과 정보 보호를 함께 확보

□ 무역구제 조치와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회원국 간 공조 확대

• 회원국들은 증거와 관련 국제규범에 근거해 공급과잉이 자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규제 조치를 추진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하며, 당국의 직권 조사 개시도 포함

- 필요한 경우 공급과잉의 원인이 되는 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철강 파생제품에 기타 무역 조치를 적용

• 우회수출 관련 정보와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해 무역조치 우회에 공동 대응할 계획

- 한 회원국의 수입규제로 밀려난 철강 물량이 다른 회원국 시장으로 이동하거나 이를 우회수출 경로 이용하는 상황을 감시하고 대응을 검토

□ 조치의 효과를 매년 점검하고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에 대한 추가 대응 검토

- **회원국들은 프레임워크에 따른 조치의 영향과 효과를 연례 평가하고, GFSEC·OECD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대응을 논의**

  - 비회원국의 제강 원료 수출제한이 공급과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생산비용을 부당하게 낮추는 규제·집행과 공급과잉을 확대하는 자금조달 검토를 모색

  - 철강산업에 공급·금융 등을 지원하는 국영기업에 대해, 투명한 경영과 공정경쟁을 권고하는 OECD 「국영기업 기업지배구조 지침」을 재확인하고 준수를 촉진

〈밀워키 프레임워크의 주요 대응방안〉

구분	내용
보조금·정부 지원	경제성 없는 설비 증설을 유도하는 지원 억제, 보조금·비시장적 관행 정보 공유
공급망 투명성	용해·주조국 등 철강 무역정보 수집·공개, 수입 감시체계 개선
무역조치 공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사, 철강·파생제품 관련 조치, 우회수출·물량 이동 감시
추가 대응	제강 원료 수출제한, 미흡한 규제·집행 및 자금조달의 영향 검토, 국영기업의 OECD 기업지배구조 지침 준수 촉진
이행 점검	조치의 영향·효과를 매년 평가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검토

[자료: GFSEC 기본합의문]

3. 반응 및 시사점

□ 미국은 무역조치 확대를, EU는 공급망 추적 강화를 강조

-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다른 국가에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유사한 대응을 촉구**

  - 미국의 철강 수입 관세는 50%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다른 국가에도 대응 강화를 촉구

  - 다만 기본합의문은 공동 관세율을 제시하지 않고 각국 여건에 따른 대응을 인정해, 구체적인 조치는 국가별 후속 발표를 확인할 필요

-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공급망 추적 분야의 협력 강화를 강조**

□ 미국 철강업계는 합의를 환영하며 관세 우회 방지를 위한 공조를 촉구

• 미국 철강제조업협회(SMA)는 시장경제 국가들이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에 공동 대응할 방향을 제시했다며 합의를 환영

- 브랜던 패리스 부회장은 공급과잉으로 세계 철강시장과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비시장적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특히 용해·주조국 정보가 철강의 생산국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3국을 통한 관세 우회를 방지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평가

• 미국철강협회(AISI)는 철강 공급과잉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관세 우회·회피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

□ 철강 공급과잉 공동 대응과 별개로 한국산에 대한 규제 가능성 상존

• 한국은 GFSEC 회원국이지만, 미국 업계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주장하며 별도 규제를 요구

- AISI 등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할당 물량에는 50%, 할당 초과 물량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할당제(TRQ)를 제안*

* 해당 요구는 업계 제안으로, 실제 정책 반영 여부와 후속 조치가 주요 확인 사항

• 우리 기업은 생산국 정보 제출 요건과 철강 파생제품 규제 동향을 점검할 필요

- 용해·주조국 정보 수집·공개 확대에 대비해 수출시장별 제출·증빙 요건을 확인

- 기본합의문은 철강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조치도 제시하고 있어, 수출 대상국의 규제 도입 여부와 적용 품목·범위도 주요 점검 대상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김예나
▪ 자료원	GFSEC 기본합의문(9.30), 폴리티코(9.30), International Trade Today(9.30)

미국 경제통상 동향

(에너지) 美 행정부, 디젤 가격 인하 조치 추진

- **트럼프 대통령, 농가·운송업계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높은 디젤 가격 완화를 위해 연료비 인하 관련 행정조치 발표 (10.5)**

- 네브래스카주 유세에서 높은 디젤 가격으로 인한 농민·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연료비 인하 행정조치를 발표

- 주요조치: ▲적색 디젤의 도로 사용 관련 벌금 한시 면제 ▲재무부에 연방 디젤세 납부 연말까지 유예 조치 지시 ▲농가의 적색 디젤 공급·접근성 확보 및 주정부 동참 권고 등

-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디젤 공급이 감소하고 미국 내 연료 가격이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농가·운송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책 마련**

- 10개 주가 적색 디젤 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일부 주는 농업용 디젤 세금을 면제한 가운데, 미국 평균 디젤 가격은 10월 5일 갤런당 6.199달러로 전주보다 0.183달러 내렸지만, 전년 대비 2.488달러 높은 수준

- 행정부는 당초 미국산 디젤 수출 금지를 검토했으나 동 방침을 철회하고, 농업계의 수출 제한 요구에도 적색 디젤 확대·연료세 인하 등 완화책 추진

- 전문가들은 관련 조치가 운송업계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면세 디젤을 사용하는 농가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세금보다 공급 부족이라고 지적

- 동 정책은 고유가로 부담이 커진 농촌 지역 부담 완화 성격으로, 향후 디젤 수출 제한 등 추가 대응 여부가 주목

▪ 자료원 | 폴리티코(10.5), EIA(10.6)

(관세) 철강 관세 산정 지침 관련 美CBP 상대 소송, 절차 위반 여부 쟁점

-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5.12월 내부 메모에서 232조 철강 관세(50%) 부과 시 가공·노동·코팅 비용 등을 공제하지 않도록 안내하자, 나사·볼트 등 철강 체결류 수입업체 Express Fasteners가 '26.1월 국제통상법원(CIT)에 제소**

* '25년 232조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 백악관 포고문은 완제품 내 '철강 함량'에만 관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했으나 가치 산정 방식은 불명확 ('25.6월 백악관 포고문)

- 메모는 전량 철강 제품은 제조·노동·코팅 비용을 공제할 수 없고, 비철강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 부품 원가만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

- 원고는 동 메모가 정식 규칙 제정 절차(공고·의견수렴) 없이 기존 CBP 공지·FAQ (철강 구매가 기준)를 변경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

- **법무부는 9.16일 원고의 서면심리 판결 신청에 맞서 정부 승소 판결 및 일부 청구 각하를 신청**

- 절차 위반(APA) 청구는 이의신청 거부 후 제기한 현 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

- 동 메모는 CBP 직원용 내부 지침으로 새로운 요건을 창설하지 않았으며, 관세는 실제 지불 가격 기준이므로 100% 철강 제품은 전체 신고가치에 부과된다는 주장

- **전문가 6명은 원고 측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前 CBP 관료 제임스 킴 변호사(ArentFox Schiff)는 메모가 공식 경로로 공개되지 않아 수입업자 고지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 원고 답변서는 이달 중 제출 예정이며, 구두변론 일정은 미정

▪ 자료원 | 폴리티코(10.6), CIT 소장(1.27), 법무부 서면(9.16)

(통상) 美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 한·중 수출통제 및 공급망 관련 국무부에 브리핑 요청

- **美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존 물레나르**(John Moolenaar) **위원장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최근 한·중 간 수출통제·공급망 협력 확대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공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부의 점검을 요청**(9.28)

- 물레나르 위원장은 한·중 간 수출통제 대화채널 확대가 중국에 미국과 동맹국 간 정책 협의 내용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이 중국의 영향력 행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 내 미국·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

- 국무부에 10월 31일까지 한·중 관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하고, 국방부·상무부·USTR 에도 서한을 송부

- **현지 언론은 이번 서한을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및 경제·기술 관계에 대한 미 의회 일각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도**

- 로이터는 물레나르 위원장이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미 간 마찰이 향후 한국의 전략적 정렬에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고 보도

▪ 자료원 | 로이터(9.30), 인사이드(10.01)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핵심광물 (9.29)	S.5587 (9.29)	John Hickenlooper (민)	〈국가 핵심광물위원회 설치법 (National Critical Minerals Council Act)〉 ▪ 백악관 산하에 국가 중대광물위원회를 신설하여 미국의 핵심광물·중대소재 국가전략을 수립·조정하도록 하는 법안
핵심광물 (9.30)	S.5637 (9.30)	Chris Coons (민)	〈핵심광물 혁신 파트너십법〉 ▪ 미국 내 핵심광물 기술·공급망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광물 혁신 파트너십(Critical Minerals Innovation Partnership)을 설립하는 법안
관세 (9.30)	S.5666 (9.30)	Bernie Moreno (공)	〈태양광 관세 유예 부당 면제 관세 징수법〉 ▪ 태양광 관세 유예 조치로 인해 부당하게 면제된 관세를 재평가하고 징수하도록 규정

* 10월 6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Peterson	10/14(수) 9:00 am	〈How do we deal with Chinese overcapacity?〉 ▪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향, 관리무역의 가능성과 미·EU 공조 여부를 중심으로 향후 통상 긴장 경로를 점검하는 논의	링크
American German Institute	10/14(수) 10:00 am	〈Climate, Economic Security,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속에서 미·EU가 기후와 경제안보를 연계한 협력 전략을 어떻게 구축할지, WTO 규범 개혁 필요성, 그리고 GASSA 등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규범·협정·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	링크

* 10월 6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Can AI Run in Space? Google Is About to Find Out (구글, 우주 데이터센터 첫걸음…AI 칩 탑재 위성 발사)
	구글은 태양광 기반 우주 데이터센터 구상을 시험하기 위해 10월 1일 AI 칩 4개를 실은 위성을 발사했으며, 1년간 우주에서 AI를 구동하며 방사선과 과열 등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
The Washington Post	White House blocks Politico from trip on Air Force One (백악관, 출입 금지 제동 이후에도 폴리티코 동행 취재 차단)
	백악관은 9월 폴리티코·CNN·MS NOW에 대한 출입 금지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10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네브래스카 방문에서도 폴리티코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
The New York Times	California Prepares to Ban Quartz Countertop Production (캘리포니아주, 노동자 폐질환 확산에 인조석 상판 생산·설치 금지 추진)
	캘리포니아주는 주방 상판 가공 노동자에게 실리카 분진 흡입으로 발생하는 폐질환인 규폐증이 확산되자, 결정질 실리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인조석의 생산·설치를 금지하는 긴급 규정을 10월 중 의결할 예정
The Hill	Trump launches America.gov, AI-powered government services hub (AI 기반 연방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 America.gov 개설)
	미 정부는 AI로 정부 정보·서비스를 안내하는 통합 웹사이트 America.gov를 개설했으며, 2027년 초부터 여권 신청·메디케어 가입 등도 지원할 예정
Bloomberg	US Investors Drive Record Haul for European Defense Startups in 2026 (美 투자자, 유럽 방산 스타트업 투자 주도…유럽 자본 첫 추월)
	올해 유럽 방산 스타트업 투자액 74억 달러 중 미국 자본이 47%를 차지해 유럽 자본의 44%를 처음 웃돌았으며,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 수도 455곳으로 2023년의 두 배로 증가

* 미국 동부 시간 10월 5일 14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30	드론 정책 사례로 본 미국의 통합적 안보통상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6.9월
US26-29	미국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와 우리 기업 시사점	2026.8월
US26-28	美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 및 소송 동향	2026.8월
US26-27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온쇼어링·자국산업 보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6.8월
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2026.7월
US26-25	美 USTR「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7월
US26-24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지 반응	2026.7월
US26-23	美 BIS, 커넥티드 차량 '적격 공급자 목록' 일반 허가제 분석 및 시사점	2026.7월
US26-22	美 반도체 232조 관세 추진 동향 및 현지 업계·기관 평가	2026.7월
US26-21	美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20	트럼프 대통령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 시사점	2026.6월
US26-19	OECD「Steel outlook 2026」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7.30		
2026.5.28.		

문의	이메일	전화
	mkpark@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